



프랑스 : 국가재건위원회 출범과 노동정책

이준용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22년 9월 8일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재건위원회의 출범을 발표했다.¹⁾ 위원회의 목적은 프랑스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국가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6월에 국가재건위원회의 안건을 처음 공개했으며, 위원회 창설동기를 1943년 레지스탕스위원회에서 찾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대표들로 구성된 레지스탕스위원회는 프랑스의 해방과 재건을 목표로 국민을 위한 다수의 경제·사회 강령을 채택했다. 또한 1946년 경제사회환경위원회가 정치·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국가재건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며 수평적인 의사 결정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 공무원, 노조 대표, 기업인 및 민간 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열게 된다. 정부는 야당과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지만 민주노동총연맹(CFDT), 기독교노동자연맹(CFTC), 자율노조연맹(UNSA)을 제외한 다수의 노조는 2022년 9월에 열린 첫 회의의 참석을 거부했다.²⁾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을 포함한 거대 노조와 정부 사이에 회의의 실효성

1) Gouvernement, "Le Conseil national de la Refondation", <http://www.gouvernement.fr/> (2022.10.5).

2) Libération, "Coquille vide. Qui participe au Conseil national de la refondation?", <http://www.>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목격되고 있다.

한편 2022년 9월 1일 마크롱 대통령은 대중 연설에서 그의 정치적 우방인 프랑수아 바이루를 국가재건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10월 3일 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국가재건위원회가 국가 및 지역 단위로 선정한 주제는 일곱 가지로, 기후와 생물 다양성, 주택, 노동, 청년, 주권과 경제, 디지털화, 고령화이다.

■ 국가재건위원회 구성

국가재건위원회는 전체 회의, 주제별 회의, 지역별 회의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³⁾ 첫째,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체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며, 당면한 주요 현안을 중점으로 다룬다. 전체 회의는 특정 현안에 관한 핵심 주제를 구체화하여 의제에 포함하며, 추후 주제별 회의와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주제별 회의는 기후와 생물 다양성, 주택, 노동, 청년, 주권과 경제, 디지털, 고령화를 주제로 핵심 관계자들과 토론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셋째, 지역별 회의는 교육, 보건, 노동, 생태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일상과 필수적인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각 지역이 직면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교육 부문에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내 불평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어 학생 복지를 개선하고 추후 직업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보건 부문에서는 기존의 주치의 등록제를 개선하는 등 고령자와 취약계층 대상 의료시스템 개혁을 단행한다. 그리고 노동 부문에서는 기존의 고용 센터(Pôle emploi)를 “프랑스 노동(France Travail)”으로 개편해 정부의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도모한다.

liberation.fr/ (2022.9.6).

3) Conseil national de la refondation, “La méthode CNR”, <https://conseil-refondation.fr/> (2022.10.3).

■ 참여 집단 현황

프랑스 민주운동당의 총재이자 2017년부터 마크롱 대통령과 연대하여 그의 정치적 우방으로 남은 프랑수아 바이루가 국가재건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주제별 회의와 지역별 회의 토론을 주재하는 바이루 사무총장은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향을 지닌 여러 정치·사회 집단을 설득해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담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마크롱 정부 초대 총리직을 맡은 에두아르 필리프는 국가재건위원회의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사회당, 불복하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국민연합당 소속 의원과 대표는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노조의 경우, 민주노동총연맹, 기독교동자연맹, 프랑스기업운동(MEDEF), 중소기업연맹(CPME)은 회의 참석 의지를 표명했지만, 회의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정당, 노동조합, 민간단체의 유보적인 입장은 지역 단위 집단에서도 나타났는데, 지역 공무원 협회인 프랑스 시장협회(AMF)와 프랑스지방자치단체연합회(ADF)는 초기에 회의 참여를 거부했지만 결정을 번복했다.

■ 2022년 12월 2일 제1차 노동 부문 주제별 회의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는 기존의 노동환경을 크게 바꿨으며, 이미 진행 중이던 노동 부문 생태·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12월 2일 파리 국립공예원에서 노동 분야 첫 국가재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정치계 인사를 비롯한 민간부문 사회적 파트너, 교육자, 노동자가 모여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노동의 의미, 노동과 삶의 조화, 노동의 미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노동개혁에 관한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을 비롯한 노동의 질 개선과 국민보건 보장이다. 셋째, 사회적 대화 강화를 통해 사회 주체의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동의 생태·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노동개혁을 주제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구조와 디지털화된 구직 과정이 논의됐다.

구직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성장, 기술 공유, 재택근무 장려, 노동과 개인 삶의 균형, 업무수행의 자율성 및 유연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1998년과 2019년 사이에 직장 내 디지털화를 경험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51%에서 79%로 증가했으며, 특히 상업과 서비스 부문은 26%에서 60%, 숙련노동 부문은 24%에서 53%로 증가했다.

둘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텔업이나 요식업 부문 등 특정 서비스 산업에서 고령자나 장애인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한편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⁴⁾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2019년 기준 약 78만 건 발생했다. 같은 해 약 4만 명의 노동자는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 판정을 받았고, 790명은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⁵⁾

셋째, 사회적 대화 구조와 전개 과정을 개선하며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기업들은 특히 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협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으며(9.4%), 노동시간 개선과 관련한 토론 참여율이 6.1%로 그 뒤를 이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직원 10인 이상 비농업 부문 기업의 16.6%는 경제·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단체교섭에 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2019년과 2022년 사이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치는 43%에서 51%로 증가했다.

■ 노동 부문 대국민 설문조사

이처럼 국가재건위원회는 노동 부문 첫 회의를 진행하고, 2022년 10월 3일부터 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후와 생물 다양성, 주택, 노동, 청년, 주권과 경제, 디지털, 고령화 총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한 국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4) Service Public, “Santé au travail : ce qui change”, <https://www.service-public.fr/> (2022.5.5).

5) Dares, “Quels sont les salariés les plus touchés par les accidents du travail en 2019?”,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 (2022.11.2).

<표 1> 질문 1 : 노동의 미래를 특징짓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제	%	주요 내용	%
노동조건 개선	20	유연성과 적응성	5
		재택근무와 출퇴근 혼용	4
		노동시간	3
		자율성과 신뢰감	2
		직무 난이도에 대한 고려	2
		노동과 삶의 조화	2
직업 인정에 대한 욕구	17	직무 가치 탐구	4
		직업 인정	4
		성취감과 동기 부여	4
		배려하는 환경	3
		참여적 노동과 수평성	2
임금 상승	10	임금 상승	7
		직업 안정성	1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임금	1
		생산된 가치의 공정한 분배	1
모두를 위한 노동	9	평등한 노동	3
		안전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노동	3
		고용 불안, 실업, 불평등 심화 우려	2
직업훈련과 능력 향상	7	직업훈련과 능력 향상	5
		진로 문제	2
완전고용 전망	6	불확실한 전망	2
		완전고용에 대한 희망	1
		지원	1
		매력적인 직업	1
혁신과 성과	5	디지털 기술의 사용	2
		경쟁력과 효율성	1
		현대화와 혁신	1

향후 정책방향 보안을 목표로 했다. 이하에서는 노동 부문 대국민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 관련 설문조사에는 4,058명의 국민이 참여해 37,102개의 응답을 남겼다.⁶⁾

6) Conseil national de la refondation, “Synthèse de la première consultation”, <https://conseil-refondation.fr/> (2022.11.25).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 현실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 내용은 급여 인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일부 응답자는 부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직장에서 더욱 자율적인 노동, 융통성 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희망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4일 근무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한 직장 내 유연성 확보, 퇴직연령 재검토, 고용 복귀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 1〉에 드러난 수치를 살펴보면, 응답자별로 노동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접근 방식이 모두 상이하게 드러났다. 노동시간과 장소 등 물질적인 조건의 변화부터 직장에 대한 만족감, 노동과 개인 삶의 적절한 균형 등 사회적 조건과 직장 내 수평성,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됐다. 응답자의 20%는 노동조건 개선 및 변화를 추구하며 더 유연한 근무형태, 재택근무와 출퇴근의 혼용,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으며, 노동과 삶 사이 더 나은 균형 찾기를 희망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7%는 직업 인정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며,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간병인, 교사, 사회복지사, 가사도우미 직군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해당 부문에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0%는 임금 상승을 꼽았는데, 공정한 임금 책정, 임금 인상을 미래 노동의 주요 과제로 봤다. 나머지 응답자는 평등한 노동, 완전고용에 대한 희망, 디지털 기술발전을 통한 노동혁신에 대한 기대를 표했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미래 노동 전망과 일치했다.

질문 1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관련한 우선순위에는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임금 인상과 복직 장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 및 지도 강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응답자의 15%는 노동조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보았으며, 노동의 유연성, 자율성 확보와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한 노동과 개인 삶의 조화를 추구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0%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장 내 소통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영 개편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존의 오전 9시~오후 5시 근무 체제를 벗어나 35~39 법정 근로시간 내 유연성 확보를 주장했다. 응답자의 14%는 노동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 제안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재분배를 통한 임금 불평등 해결을 희망했다. 이에 더하여 남녀 임금 격차를 해결하고 상여금 지급을 통한 임금 인상과 관련한 소수의 의견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응답자의 12%는 직업훈련 및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디지털 산업과 미래 산업 부

<표 2> 질문 2: 노동 부문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제	%	주요 내용	%
노동조건 개선	15	유연성 확보와 자율성	3
		재택근무 권장	3
		노동과 삶의 조화	2
		안전과 건강 보장	2
임금 상승	14	임금 인상	7
		창조 가치 분배	3
		임금 불평등 해결	2
직업훈련 및 지도	12	직업훈련 장려	5
		직업 체험 제공	4
		이직과 재교육 지원	2
노동환경 발전	10	노동 가치 향상	7
		소통 개선 및 사회적 대화	3
고용 복귀 장려	8	매력적인 직업 제공	3
		직업 안정 발전	2
		구직자 지원	2
노동시간 개선	8	노동시간 단축	5
		퇴직연령 재평가	3
기업 지원	7	필수 직종 재평가	2
		노동비용 절감(세금, 사회적 비용)	2
노동 의미 부여	5	노동 의미 부여	3
		노동 가치 회복	2

문의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학교와 직업소개소에서 제공되어 청년 구직자나 복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대상 지원이 강화될 것을 요구했다. 응답자의 8%는 고용 복귀를 장려하는 정책을 정부의 우선 과제로 파악하면서, 고용센터의 구직 지원 강화, 실업 급여체계와 퇴직연령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중 5%의 응답자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하며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30시간)을 검토하거나 북유럽 국가와 유사한 방식의 주4일 근무를 제안했다. 끝으로, 응답자의 7%는 정부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기술직과 단순노무종사자 등 필수 직종의 재평가를 통한 세금이나 사회적 비용 등 노동비용 절감

<표 3> 질문 3: 노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제	%	주요 내용	%
임금 상승	18	임금 인상	8
		부의 재분배	3
		임금 불평등 해결	2
		저임금 직종 재평가	2
고용 복귀 장려	11	복직 지원	6
		필수 직종 재평가	3
직업훈련 및 지도	10	직업훈련 장려	4
		청년 대상 직업훈련 제공	4
노동시간 개선	10	주당 노동시간 단축(주4일/주30시간)	5
		퇴직연령 유지	2
		노동시간 단축	2
노동환경 발전	10	노동환경 개선과 인정	6
		사회적 대화 강화	4
노동조건 개선	9	재택근무 추진	3
		유연성 확보와 자율성	2
노동 의미 부여	6	동기 부여	4
		노동 가치 회복	2
기업 지원	4	인건비 절감(과세/사회부담금)	4

을 요구했다.

질문 3은 질문 2와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질문 2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노동 관련 우선순위로 꼽았지만, 질문 3에서 이것이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임금 인상, 저임금 직종 재평가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이전 응답과 유사했다. 응답자의 18%는 노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으며, 현재 치솟는 물가 상승세를 반영한 임금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11%는 정부의 고용 복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고, 실업수당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는 복직 후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병인, 교사, 군인, 경찰 직군의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노동과 관련한 능력 향상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지도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으며,

학업 도중 인턴, 실습 과정(alternance)을 대폭 늘리고 기업 내 멘토링, 튜터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세대 간 전문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제안했다. 학위증이 없는 청년에게도 취업 기회를 부여해 취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의 6%는 노동자의 동기부여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 맺음말

프랑스 정부는 국회의원, 지역 공무원, 노조 대표, 기업인, 민간 협회 관계자가 협력하여 국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논의하는 국가재건위원회를 조직했다. 국가재건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산업 생태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관련 대책을 논하며, 이러한 논의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 위원회의 구성, 주제·지역별 회의 운영방식, 회의의 실효성, 기존의 유사 단체들과 협력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결점을 보였다. 정치계는 이러한 점을 두고 위원회가 재선에 성공해 새로운 임기를 앞둔 마크롱 정부의 정치적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가했으며, 야당 대표 다수가 전체 회의를 포함한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위원회가 야당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관계자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KLI**